

80年代 日本에서의 中國史研究와 中國現實에 의 對應

—「辛亥革命國際會議」·「封建制論」·
「洋務派論」을 中心으로—

閔 斗 基*

1. 中國史研究의 새로운 움직임

日本の 代表的 歷史學研究誌인 『史學雜誌』의 제93-5호는 1983年度の 日本에서의 歷史學研究의 成果를 소개·비판하는 글로 채우고 있다. 그 중 明清部門의 筆者(片山剛)는 足立啓二(熊本大學 助教授)의 「中國封建制論의 批判的 檢討」(『歷史評論』1983年 8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中國史에서 封建時代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疑問을 제기하였음을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pp. 795-797). 日本의 中國史學界의 가장 영향력 큰 흐름이라 할 이른바 東京學派에서, 宋代以後의 時期를 封建制時代로 잡고 그 理論的 支柱로서 地主佃戶制論, 鄉紳論이 전개되어 왔으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거의 疑問의 余地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터에, 中國史에서 封建制 自體의 設定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을 『史學雜誌』가 論究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인 것이다. 足立啓二의 主張은 中村哲(京都大學 教授)의 『奴隸制·農奴制의 理論——마르크스 Engels의 歷史理論의 再構成——』(東京大學出版會, 1977)과 中國史研究會編 『中國史像의 再構成——國家와 農民』(文理閣, 1983)에 근거하고 있음도 아울러 소개하

* 서울大 人文大 教授

고 있다. 中村哲의 저서를 원용하는 것은 宋代以後의 地主·佃戶關係를 가지고 그 時期를 封建制로 잡는 것은 마르크스 앵겔스가 이해한 封建制 概念과도 다르다고 하고자 함이었다. 또 『史學雜誌』의 같은 號의 近代部門 집필자(針谷美和子)는 近代史에 있어 封建的 支配階級の 利益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거의 전면적으로 否定되던 이른바 洋務派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東京大學의 溝口雄三교수의 「近代中國像은 비뚤어져 있지 아니한가——洋務와 民權 및 中體西用과 儒教」(『歷史와 社會』 제 2 호, 1983年 5月)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사실 西洋史의 古典的 概念으로 보나, 또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封建制란 分封的 領主制와 農奴制의 두 가지를 根幹으로 하는 概念인데 감히 前者를 불문에 부치고 後者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中國史에 農奴制的 特質을 찾으려 한 명백한 모순에 대하여 여태까지 거의 아무도 비판하려 들지 아니한 것은¹⁾ 封建制를 유럽의 그것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日本의 것도 中國의 것도 각각 封建制의 ‘한 類型’으로 보고 그 共通의 基幹으로서 農奴的 支配(地主에 의한 農民支配)를 설정한다는 레토릭이 훌륭하기 때문만은²⁾ 아니었다. 뒤에 자세하게 논술하겠지만 그것은 戰後日本의 日本人의 敗戰에의 反省과 未來에의 指向을 中國史認識에 걸어야 했던 지극히 日本的인 精神史的 狀況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封建制論이 批判받게 되었으니 이는 中國史認識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이같은 일은 日本의 中國史研究의 근거를 흔들게 될 지도 모를 일일 뿐아니라 日本의 現代精神史的 狀況의 커다란 轉換이 될 수도 있다. 戰後 日本의 中國史認識은 한편으르는 明治以來의 日本 近代史의 成果가 否定되고

1) 이른바 京都學派에서 宋以後 近世說을 主張하였으나 그 點은 宋以後의 農民의 身分이 農奴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論證하려 애썼지, 왜 農奴制만이 封建制의 特質이 되는가를 논증하려 들지는 않았다. 즉 封建制는 農奴的 特質만 논증되면 성립이 가능하다는 공통의 場에 있었던 것이다.

2) 仁井田陞, 『中國法制史』(1952. 岩波書店, 岩波全書) p. 136.

오히려 封建遺制의 殘存과 그 克服이 강조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中國의 社會主義야말로 日本의 未來의 모범이라고 보는 信念으로 다져진 것이었다.³⁾ 그런데 그 中國의 社會主義가 급작스럽게 성격을 바꾸어 美國·日本과 融和되고 ‘同盟’이 이루어져 戰後의 第3世界를 지도하는 이념이던 平和五原則은 이른바 베트남 ‘懲罰’戰爭으로 완전히 포기되고 (제국주의 세력으로 간주되던)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기술과 차관, 경영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인류사상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였던 毛澤東思想은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中國‘現實’의 변화에 자극받아 여지껏 의문조차 제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새로운 視角들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중국의 사회주의와 그 역사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되고 가치관의 혼미상태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⁴⁾

2. 戰後 日本의 中國史研究의 基本認識

戰後 中國의 社會主義가 중국연구자뿐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에게 日本의 未來의 지향과 연결되었음은 앞에서 자주 언급하였는데, 왜 그리고 어떤 형태로 그렇게 되었는가?

太平洋戰爭의 敗北는 日本人에게는 일상생활의 괴로움 이상으로 큰 상처를 입혔다. 明治維新 以來로 서양을 모방한 近代化의 물결을 타고 ‘우등생’답게 선진국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리고 이웃해 있는 중국을 ‘우등생’답게 경멸하며 억압해 왔는데, 어느날 보니 日本의 近代化는 軍國主義, 帝國主義로 치달아 자기들의 스승인 西洋으로부터 얻어맞아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두리번거리고 보니 어제까지 후진국으로, ‘낙제생’으로 멸시했던 中國은 승리자의 위치에 올라앉아 있었다. 앞으로 日

3) 中國史研究會編, 『中國史像の再構成』 p. 12.

4) 『中國史像の再構成』 pp. 12-13 및 坂野良吉, 「中國近代研究の思想と方法—波多野史學の軌跡を顧りみて—」(『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6, 1980) pp. 20-21.

本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같이 방향감각의 상실에 빠져 있을 때 1948年 4月 中國文學者인 竹內好의 「近代란 무엇인가(日本과 中國의 경우)」란 글이 발표되었다. 日本의 明治以來의 ‘進歩’를 노예의 진보라고 비유한 竹內는 진정한 노예는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존재임을, 魯迅의 精神을 근거삼아 주장하였다. 近代日本의 主體性的의 결여는 優等生文化를 관들였지만 그 결과가 敗戰이었다. 主體性的의 결여는 轉向(轉身)에 能하나(主體的으로 自己를 保持한) 回心은 할 수 없는데 中國은 바로 그 回心の 文化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어제까지의 ‘後進’이 오늘은 ‘進歩’로 位相을 달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 竹內는 같은 취지를 발전시킨 수많은 글을 써서 現代日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리하여 日本의 앞날은 明治以來 추구해온 우등생 문화로서의 ‘近代’를 主體性을 가지고 超克하는 것이 앞으로의 日本의 方向임이 설정되었고, 그것이 日本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무렵 竹內好의 말을 反證이라도 하듯 1949年에 中國社會主義의 勝利라는 엄청난 사실이 첨가되었다. 그 人民中心의, 農民主動의 文化단이 부르조아적, 都市中心의인 日本의 近代化에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⁶⁾ 日本의 未來는 당연히 革命의 成就와 연결되어 人民中國의 成就是 ‘世界史的 普遍的 近代化’의 實現이 아닌, 前近代와 近代(의 미참)를 아울러 극복하는 ‘獨自의 길’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竹內의 영향에 대하여 이름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경우의 예로써 東京大學 中國哲學科 교수인 溝口雄三의 글 「‘中國近代’를 보는 視角」을 들 수 있다.⁷⁾ 글이 竹內의 이름을 들지 않았더라도 坂野良吉(埼玉大學 助

5) 竹內好, 『現代中國論』(1964. 東京, 勁草書店) 所收. 이 글 이후 竹內는 수많은 같은 방향의 글을 써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6) 小島普治, 『太平天國革命の歴史と思想』(1978, 東京) p. 374 및 石田米子, 「最近の日本に於ける辛亥革命研究の諸成果をめぐって」(『東洋史研究』39-1) p. 158.

7) 閔斗基編, 『中國現代史의 構造』(1983, 청람문화사) 所收.

教授)가 戰後의 中國 近代史研究의 특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총괄에서 竹内の 영향, 또는 竹内の 같은 사고에서 출발한 中國史研究認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⁸⁾

戰後의 中國 近代史研究의 隆盛은 軍國主義的 과시즘의 붕괴와 中國革命의 勝利에 의해 고무된 것이었다. 그 결과, 戰後의 研究는 거의 공통된 認識으로서 戰前의 植民地支配의 理論이었던 아시아社會 정체론의 극복, 그리고 帝國主義와 그 近代化를 극복하려 한 新民主主義革命 形成過程의 검증이라는 두 과제를 내걸었다. ……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 이 時期의 유산은 지극히 큰 것인바, 그것에 관통된 역사인식을 투시하면 다음의 네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로 中國社會의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이니, 중국사회에 정체와 낙후가 植民地支配를 가져왔다는 이데올로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로 (日本을 포함한) 先進歐美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近代的 進歩를 저해해 왔다는 사실로부터 先進한 歐美, 日本에의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帝國主義支配와 아울러 封建的(前近代的이란 뜻에서의) 질곡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모순의 지양까지도 꾀하고 있던 中國에서 역사진보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셋째로 역사진보나 사회변혁에 대한 노동인민대중의 적극적 기여에 대한 깊은 확신이었다. ……네째로 과학적인 역사연구의 표방이다. 그 경우 먼저 중시된 것은 社會經濟史였다. ……경제과정의 변화를 通하여 中國社會에서 世界史法則의 관철에 의한 자극을 밝히려 한 점이다.

그러기에 戰後의 日本의 中國史研究는 再生日本의 ‘良心의 거점’이라는 도덕적 정당성까지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1981年「辛亥革命七十周年記念國際會議」와 學界狀況의 變化

이른바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이 烏有로 돌아가고 中國이 ‘四大 現代化’노선을 따라 ‘走資’적인 變化를 추구해감에 따라 日本의 中國史

8) 後藤延子は 丸山松幸의 著書, 『中國近代の革命思想』의 書評(『東洋史研究』 42-3, 1983.12)에서 竹內好의 이름을 들어 丸山松幸의 연구에의 영향을 말하고 있다.

研究者의 대부분, 특히 中國革命의 ‘先進性’을 확신하고 文革을 人類史의 새로운 실험으로 보고자 했던 ‘進步的’ 연구자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立場을 달리하여 中國近代史의 展開에서 落後를 인정하는 연구자들을 ‘帝國主義的 支配階級的 視點’에서 研究하는 學者로 규정하여, 學問的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까지 비난하였던 터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保守的 研究者들의 견해가 옳았다 고도 받아질 수 있는 文革以後의 狀況下에서, 양쪽 연구자가 한자리에 앉아 ‘변질된’ 社會主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中國學者와 同席하여 1981년에 辛亥革命을 기념하는 國際심포지움을 舉學界的으로 개최한 것은 학계의 상황이 크게 변한 端的인 例였다.⁹⁾

中國近代史 研究者사이에 연구경향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 것은 1962년의 이른바 ‘A·F문제’였다. ‘A·F문제’란 戰後의 日本의 中國史研究 蓄積을 歐美學界에서 활용토록 하기 위한 方便으로 미국의 ‘아시아財團’과 ‘포드財團’이 거액의 자금을 日本의 中國史學界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데서 생긴 문제들을 말한다. 두 財團은 실증적이고 보수적인 기풍을 지녔던 東洋文庫에 近代中國研究委員會를 설치하여 近代中國關係資料의 수집을 돕고, 학자들에게 외국연구여행 경비를 대며, 연구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辛亥革命에 혁명적 의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紳士層에 의한 權力保持運動으로 밖에 보지 않은 市古宙三(中央大學 教授, 뒤에 오자노미즈女子大學 教授)씨가 그 연구위원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東京教育大學의 野澤豊씨를 중심으로 한, 辛亥革命을 毛澤東의 정의에 준한 부르조아지의 革命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우선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財團과 포드財團의 원조제공은 학문연구에 정치적 끈을 달아맨 것이며 미국의 文化帝國主義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9) 辛亥革命東京國際會議의 경과에 관해서는 그 실질적인 主管者였던 衛藤瀧吉의 「辛亥革命研究の動向について—’81シンポジウムを中心に—」(『學術月報』35-11, 1983.2)에 주로 의거하였다.

市古씨와 野澤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辛亥革命의 評價에 있어 현재 하게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A·F문제’가 확대되게 된 요인의 하나였지만, 그런 학문적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戰後以來 日本의 지식인들이 中國에서 전개되는 革命·政治變化에 밀착하여 日本의 현실 상황을 비판해 온 지적 풍토가 더 큰 관계를 갖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人民中國’의 현실은 옳은 것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던 터에 1960년에 美日安保條約改正 반대운동이 가위 전국민적으로 일어났다. 그 조약의 개정으로 美·日의 군사동맹이 강화되어 그 진보적인 중국에 적대하게 된다는 認識하에서였다. 이러한 認識態度는 美國(의 帝國主義)은 ‘中國과 日本 人民의 共同的 敵’이라는 당시의 中國側 認識과 그 方向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安保反對運動과 A·F資金 反對運動은 맥을 잇고 있었던 것이었다. 東京大學의 衛藤瀧吉교수, 名古屋大學의 波多野善大교수 등은 이 A·F 자금계획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었는데, 앞에 본대로 그들에 대한 비판은 ‘도덕적’인 면으로까지 번졌던 것이니, A·F자금계획에 참가하는 것은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도덕적으로까지 문제되는 풍조가 팽배하여, 소수의 A·F자금 활용과 대다수의 반대운동자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패이게 되었다.

이같은 풍조를 더 격화시킨 것은 1960年代 후반의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이었다. 그리고 駐日 美國大使인 ‘에드윈·라이샤워’ 교수의 近代化論에 바탕을 둔 학문적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도 연결되어 나갔다.

그러나 이 역시 같은 무렵에 전개된 中國에서의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으로 인해 A·F문제 반대론자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文化大革命에 회의를 품은 一派와 文化大革命을 찬양하는 一派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前者는 毛澤東主義를 社會主義의 異端으로 간주해 왔고 따라서 文化大革命에 대해서도 반대해 온 日本共產黨의 立場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前者에는 東京教育大의 野澤氏 등이 중심이 되었

고, ‘文革派’라고도 불리우는 後者에는 東京都立大學의 里井彦七郎교수, 京都大學의 狹間直樹교수, 早稻田大學의 安藤彦太郎교수 등이 있었다. 辛亥革命의 성격규정에 있어서도, 文革派는 ‘農民·都市貧民 그리고 軍服을 입은 農民인 新軍兵士’를 그 主體로 파악하려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여러 갈래 분열양상은 주변정세와 중국 형세의 변화로 크게 양상을 달리해 가게 되었으니, 1972년의 ‘닉슨’의 訪中을 계기로 하여 美國과 中國이 ‘友好’ 관계를 맺게 되고 日本과도 우호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 첫 변화였다. 美日安保條約 反對鬪爭에서 보인 反美運動 이념의 한 支柱였던 中國이 美國과 友好關係를 수립함으로써 中國 研究者들에게 커다란 당혹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다. 또한 中國의 社會主義에 日本의 未來를 걸었고 그 인식하에서 日本의 기성질서에 대해서도 반대해 왔었는데, 그 中國의 社會主義政權이 日本의 기성질서를 대표하는 日本政府와 우호의 손을 잡게 되니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76년의 毛澤東의 죽음과 四人幫의 체포로 文化大革命도 완전히 종말을 고평하고 毛澤東의 정책과 文化革命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中國 自體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니 이른바 文革派는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1981년에 辛亥革命 70주년을 맞게 되고, 中國에서 (臺北과 武漢에서) 각각 거창한 記念學術會議가 열리게 된 데 자극을 받아 日本에서도 辛亥革命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 국제회의는 주제를 辛亥革命과 國際關係로 잡았는데, 辛亥革命運動의 주동세력이 日本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하였다는 인연에 의미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서로 감정적으로까지 대립하였던 日本의 近代史研究者가 처음으로 뜻을 하나로 모아 한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다. 穩健한 입장을 취하여 中國의 社會主義政策에 대해 비판도 서슴치 않았고 ‘A·F문제’로 비판도 받았던 衛藤瀋吉교수, 文革을 비판하였던 野澤豊, 文革支持者였던 狹間直樹 등이 모두 골고루 참가한 학술회의가

된 것이다.¹⁰⁾

이렇듯 中國 自體의 變化가 日本의 近代史研究者들의 人間的인 관계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한 달라진 人間關係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연구방향이 준비되고 있다.

4. 封建制論의 再檢討

中國의 사회주의 실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지면서 중국의 현실에 밀착한 연구가 아닌 中國의 사회주의 현실을 상대화 한¹¹⁾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니, 그러한 경향의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中國史研究會의 소장연구자들에 의한 中國史에서 封建制를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¹²⁾

먼저 어떻게 하여 日本의 中國史研究者들이 ‘封建制社會’를 설정하였는가를 밝히고 있다. 첫째로 戰後의 ‘中國先進·日本落後’論이 제기된 결과 中國史의 停滯性論 克服이 과제가 되고 그를 위해서는 世界史의 基本法則을 中國史에 적용해야 했다. 따라서 분명 봉건제를 경과한 日本의 역사발전과 중국의 역사발전은 등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自明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世界史의 基本法則은 그것이 ‘基本’적인

10) 市古街三씨는 會議의 運營委員을 사퇴하였으나 會議 自體에 대해서는 협력하였다 한다. 市古씨의 辛亥革命觀 自體가 그같은 기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A·F문제」로 입은 감정적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의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며 계속 참가하고 있었다.

11) 坂野良吉는 「中國に於ける 1920年代變革と新民主主義革命史觀」(『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9, 1984.5)에서 新民主主義史觀을 普遍的 次元에서 歷史의 次元으로 끌어내리고자 한다(pp. 52-53)고 하였고, 後藤延子は 앞에 든 書評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相對視하고, 그 역사적 시점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중국근대사상사를 바라보고 그 全體像을 過不足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p. 534)고 하였다.

12) 앞에 든 『中國史像의 再構成—國家と農民』의 제 1부 「總論—中國史研究의 立場と方法」 및 足立啓二 「中國封建論의 批判的檢討」(『歷史評論』1983-8)에 주르 의거한다.

것이므로 모든 나라의 역사가 똑같은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결국 이는 西歐歷史를 전형으로 한 單系的 發展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世界史는 各國史의 단순한 총화로 보게 되었다.

둘째로 앞에도 언급한 近代化論의 도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에서의 封建制設定이었다. 60年代에 駐日美國大使로 와 있던 日本史學者 ‘라이샤워’ 교수는 日本과 中國의 近代化를 비교하여 日本은 西歐와 유사한 封建制를 겪었기 때문에 近代化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戰後의 대부분의 日本 지식인이 否定하고자 하였던 明治以來의 百年의 역사를 빛나는 ‘近代化’ 成功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中國에도 日本과 같은 封建制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되었던 것이다(한편 日本史 쪽에서는 日本의 封建制에서 아시아적 特質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째는 中國의 社會主義革命의 成果에 밀착하여 政治的 表現을 學問的 表現과 같은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1949년에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은 농민의 反封建투쟁의 승리이므로 封建時代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1949年 혁명은 近代史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의 총결산이므로 反帝反封建鬪爭의 대상인 前近代時期는 封建制社會가 될 수 밖에 없다(이 경우 近代史는 1949년에 이르는 과도기로서밖에 인식되지 못하니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르는 브르조아民主主義 ‘革命’의 시기이다. 그러니 近代史로서의 個別的 性格을 갖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革命史와는 次元을 달리한 民國時代史는 설정할 수가 없으니 日本의 中國近代史研究에 있어 혁명운동이 아닌 改革運動의 研究가 지극히 빈약한 것은 그 한 표현이다). 그러니 中國史에서 封建制設定을 否定하는 것은 ‘反帝·反封建의 투쟁으로서 그 목표를 명확히 하였고 종국적으로 성공을 거둔 인민의 해방의 과정이 전혀 엉터리였다는 말이 된다’고 하는데, 1949年 革命의 自명한 性格에 대하여 異議를 제기할 것이냐 하는 식의 ‘독단적’인 표현까지도 나오게 된 것이다.¹³⁾ 中國中世史를 封建制

13) 重田德, 「封建制의 視點과 明清社會」(閔斗基編, 『中國史 時代區分論』 서울,

로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法制史家 仁井田陞가 ‘中國의 역사에 그같은 封建社會를 설정하는 것은 첫째로는 中國社會의 경제성 이론에의 비판이고, 둘째로는 東洋과 西洋을 관통하는 全世界的 構成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세째로는 反封建鬭爭으로서의 近代中國革命의 前提에 과학적인 이해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¹⁴⁾ 위에서 본 바를 단적으로 집약·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면 이같은 배경하에 설정된 封建制論은 오늘날 여전히 타당한 것일까 하는 것이 ‘中國史研究會’系論者들의 封建制 再檢討論의 出發點이다.

世界史의 基本法則을 中國史에서 관찰하게 한다지만 과연 世界史의 發展法則은 單系的으로만 나타나는 것일까? 日本의 封建社會와 中國에 설정된 ‘封建社會’라는 것이 과연 同質의 것일까? 한쪽에는 분명 私的 個人에 의한 領域支配로의 分割이 특징인데, 다른 한편은 統一的인 關료 기구가 지탱하고 있는 전체국가가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가? 仁井田陞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中國의 封建制를 논할 때 領主支配體制로서의 上部構造를 지주에 의한 農民支配와 분리하여 그 農民支配形態를 封建主義의 한 基軸으로 삼아 그것을 검증하는 데 全力을 다하였다. 地主에 의한 農民支配의 封建的 屬性으로서, ‘主僕의 分’ 등에 나타나는 佃戶의 地主에 대한 人格的 從屬關係, 移轉의 自由의 缺如에 나타나는 自由의 拘束, 高額小作料와 規定外의 役使, 小作權의 未成立 등을 들어왔다. 이것들의 존재가 과연 논증되었는가는 周藤吉之를 대표로 하는 論者와 宮崎市定를 대표로 하는 論者 사이에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었거니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과연 그것들이 봉건제의 指標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中國史研究會’의 論者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본래 封建制의 屬性인 公的 從屬과 個別的(私的) 從屬이 ‘人格的 隸屬’이라는 名目하에 혼동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의거하는

創作과 批評社) 所收. p. 253.

14) 앞에 든 仁井田陞, 『中國法制史』 p. 135.

中村哲의 研究成果에 따르면¹⁵⁾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있어서도 封建制란 사실상 土地所有主로까지 進化하여 人格的 獨立性을 어느정도 갖고 있고 小經營主體인 農奴에 대한, 社會的으로 公認된 公的인 形態로까지 놓여진 支配가 私人에 의해 실현된 社會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封建制에서는 行政權, 民事裁判權에 이르는 公的 支配가 私的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과연 中國封建論者가 주장하는 農民의 支配가 그러한 것이었을까 하고 따지고 있다. 中國封建制論의 선에서 제기된 漢~唐間에 存在하였다는 ‘個別人身支配’라는 것도 이같은 公的 支配와 個別的 支配從屬을 混同한 것으로 본다. 農民의 支配形態로서의 中國封建制論이 中國史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인 集權的 專制君主權과 官僚機構의 역할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中國封建制論에 同情的인 柳田節子에 의해서도 1976년에 제기된 바 있지만¹⁶⁾ 이제 本格的으로 그리고 全面的으로 次元을 달리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관료제·전제군주의 公的 支配의 성격을 해명함이 없이는 中國史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과연이 약닌 것이다. 中國封建制論은 일반적으로 관료제와 군주집권체제가 특히 효율적이었던 宋代 이후 시기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中國史研究會’의 論者들은 ‘封建制의 本質은 領主支配를 核으로 하는 家父長的 支配(從屬)의 擴張(封建論者는 皇帝權, 官僚的 集權을 여기에 연결지운다)에서가 아니라, 家父長的 支配를 媒介로 한 構成的 支配의 分割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中國史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農民支配論이 中國史의 基本特徵의 하나인 權力體制, 官僚體制, 即 公的 支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補完하고자 제기된 것이 小山正明(千葉大學)교수의 「明末清初의 大土地所有」(『史學雜誌』 66-12. 67-1), 「明代의 糧長에 대하여」(『東洋史研究』 27-4) 等等의 논

15) 앞에 든 中村哲, 『奴隸制·農奴制의 理論』 참조.

16) 앞에 든 閔斗基編, 『中國史 時代區分論』 pp. 210-212.

문이었다고 하여 小山교수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小山氏의 논문은 中國史封建制論으로서는 과격적인 것이었다. 첫째로, 小山은 宋에서 明까지의 奴僕·佃戶의 성격을 奴隸的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既往의 宋以後 中國封建制論者가 農奴的인 속성의 指標로 삼은 논리가 매우 허약하였음을 결과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公的 支配의 論理로는 특징지을 수 없는 家父長的 支配의 성격이 강하고 事實上의 所有權조차도 확립되지 않은 성격이 확실히 있다면 이것을 차라리 奴隸의 속성의 지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을 실증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封建制論은 公的 支配(上部構造)의 성격규정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밝힌 것이다. 小山교수는 宋代의 形勢戶, 明代의 糧長戶層이 獨自的인 個別的 權力機構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으나, 土着的(분할적)인 權力主體가 되어 都保制, 里甲制를 통해 非完結的인 土着權력을 補完한다고 하였다. 分割的 權力構造의 存在를 이렇듯 特殊한 條件下에서 논증하려 하여 宋·明代에 이같은 노예제적 과도기적 시기를 거쳐 明末清初에 가서 鄉紳層에 의한 土着的(分割的) 權力體制가 成立함으로써 封建制가 成立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個別的 論證過程의 弱點은 小山교수의 견해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이 ‘中國史研究會’論者의 주장이다. 예컨대 糧長層의 土着的인 權力主體로 보이는 기능도 실은 公的인(국가권력기구에 종속된) 徭役으로서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小山교수의 논증방향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故 重田德교수의 鄉紳論이었다. 鄉紳支配의 成立을 封建制 成立의 指標로 잡는 重田德교수의 주장은 「鄉紳支配의 成立과 構造」(岩波講座『世界歷史』30, 1971)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 역시 封建制를 地主·佃戶關係로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國家體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체계로 잡으려고 한 끝에, ‘鄉紳’을 그 지표로 선택하였다. 鄉紳支配를 “단순한 地主支配의 틀을 벗어난 범주로 잡고 經濟的, 經濟外的 關係를 통하여, 특히 국가권력

과의 不即不離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단순히 佃戶에 대한 支配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自作農을 中心으로 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까지 ‘土地所有에 근거하지 않은 支配’를 完結하는 기초단위”로 보고 있다. 여기서 비로소 土地關係(地主支配)를 떠난 支配가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여 문제된 것이다. 그러한 지배가 封建支配의 주된 지표라는 것이다. 足立啓二교수는 그러나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과연 鄉紳이 自作農·自小作農 등으로부터의 잉여노동의 주된 부분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집중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논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동안 이 鄉紳支配論은 많은 支持를 받아 中國的인 封建支配論의 가장 성공적인 논증으로 평가되었으나 70년대 후반기부터 이 鄉紳論에 대한 비판이 점차 제기되고 있는 것에도 주목되어야 한다. 그것은 鄉紳自體의 實體의 애매함 때문이었다. 서로 공통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구체적 행동에서는 民變을 영도하는 등의 서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다른 성격의 존재까지도 鄉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一括해 버리므로써 鄉村統制의 實體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鄉紳 개념 대신 紳士 概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다. 東京女子大學의 山根幸夫교수가 미국이나 韓國에서의 研究成果에 자극받아 (『明代史研究』 第4 및 第5號, 1976, 1977. 第8 및 第9號, 1980, 1981.) 紳士概念을 쓸 것을 주장하고 紳士層 중 ‘士’에 해당하는 生監層의 實態를 밝히는 作業을 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같은 주장은 鹿兒島大學의 大谷敏夫교수도 찬성하고 있으며¹⁸⁾ 生監層이라는用語는 점차

17) 山根幸夫, 「明末農民叛亂と紳士層の對應」(『中嶋敏先生古稀記念論叢』下) 및 「河南省商城縣の紳士層の存在形態」(『東洋史研究』40-2), 「明・清初の北の市集と紳士・豪民」(『中山八郎教授頌壽記念明清史論叢』, 1977), 「明清代華北市集の牙行」(『星博士退官記念中國史論集』, 1981), 「大西政權と紳士層の對應」(小野和子編, 『明清時代の政治と社會』, 1983).

18) 大谷敏夫, 「清朝史研究の素描」(『鹿大史學』29, 1981. 2).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¹⁹⁾

1949年の 社會主義革命의 前提가 ‘反封建’ 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의 封建이 과연 역사학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라고 따진 足立교수는 그것은 결코 엄밀한 의미의 사회구성체의 성격으로서의 봉건을 의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고작해야 필요노동을 잡아먹는 고역소작료, 규정 밖의 役使, 소작료 징수를 위한 裁制機關의 存在이지 封建的인 小經營 一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反封建이란 地主的 土地所有 一般에 대한 反對이지 地主의 領域支配者的 屬性에 대한 反對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筆者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1949년의 혁명으로써 사라졌어야 할 봉건이 中國에서는 아직도 中國에 잔존해 있는 것으로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代表的인 것이 『歷史研究』 1979-1에 실린 黎澍의 「封建殘餘의 영향을 없애는 것이 中國現代化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글이다. ‘封建’ 殘餘(殘滓)의 政治的 表現이 林彪, 四人幫이며 그것들은 社會主義의 걸치레를 하고 있으므로 社會封建主義라고 불리우고 있다. ‘위대한 혁명’을 겪고서도 封建殘滓가 남게되는 要因을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하게 되는 것은 封建殘滓의 論證 過程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重田교수가 하던 대로 現實中國의 狀況에 밀착하여 그것을 지난날의 역사연구의 척도로 삼는다면 오늘날 中國에 封建殘滓가 남아 있다고 ‘中國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1949年革命의 의의의 전면 否定, 또는 全面的 再評價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

19) 山根幸夫교수는 自身이 編한 『中國史研究入門』 下(1983, 山川出版社)에 「鄉紳層」이라는 한 항목을 설정하여 「鄉紳」이라는 用語보다는 「紳士」라는 用語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p. 45-46). 같은 해에 나온 島田虔次編, 『アジア歷史研究入門』 3. 中國Ⅲ(1983, 同朋舎)에서 島田虔次도 士大夫 概念의 이해를 위해 生監層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여 韓國에서의 研究成果를 援用하고 있다. 山根씨의 연구에 자극받아 紳士 또는 生監層이라는 用語를 써 「鄉紳」層內的 기능분화에 대해 注目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森田明, 「明末清初における練湖の盜湖問題」(앞에 든 『明清時代の政治と社會』), 西村元照, 「清初の包攬」(『東洋史研究』 35-3) 등이 있다.

연 그것은 적절한 일이 될 것인가?

5. 洋務派論의 再檢討

1979年 以來의 中國現實의 變化가 준 충격을 새로운 시각으로 소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溝口雄三교수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1980年 11月에서 1981年 2월에 걸쳐 『UP』誌 96-99호에 발표된 「中國近代를 보는 視角」은²⁰⁾ 竹內好가 제시한 先進-落後의 도식에 반발하여 그것을 거꾸로 中國은 역시 落後되고 日本은 역시 先進이었다는 식으로 뒤집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溝口는 구축하였다. 그것은 곧 여전히 西洋을 척도로 한 관점이라고 지적한 溝口교수는 非유럽이나 아냐냐 하는 立場이 아닌 ‘異유럽’적 立場을 바탕으로 하여 中國史를 있는 그대로, 밖으로부터의 척도, 即 西洋(西洋的 近代)을 克服했느냐 추종했느냐 하는 尺度가 아니라 中國史 自體에 內在한 展開過程을 살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溝口교수에 의하면 중국 근대의 특성은 ‘總體의 公과 均’의 大同的 展開에 있다고 한다.

20세기 초의 중국의 공화혁명의 경우 그것이 天下的 全體의 生存의 充足을 목표로 한 大同的이며 ‘大私’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유럽의 그것처럼 ‘私’有權의 확립을 바탕으로 한 자유, 평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民權의 경우도 多數者 全體가 小數者의 專制的 ‘橫私’에 대항하는 國的 次元의 民權이 된다는 것이다. 본디 중국은 유럽적 근대애의 趨向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그것은 ‘缺如’라고 하기보다는 어쩔수 없는 ‘中國的 近代’의 충실이라고 본 그는 文化大革命의 十年動亂도 따지고 보면 그 중국적 근대가 주는 제약과 갈등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 근원은 思想的으로는 前近代 以來의 뿌리깊은 ‘理’의 優위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溝口의 이 주장은 점차 반응을 얻어가고 있는 듯 하니

20) 앞에 든 閔斗基編, 『中國現代史의 構造』 pp. 281-293.

埼玉大學교수 坂野良吉는 「毛澤東主義의 歷史的 性格을 둘러싸고」(『歷史學研究』 514號, 1983年 3月)에서 溝口의 이 시각에서 많은 시사를 얻었다고 하고 있다.

溝口雄三교수의 또다른 새로운 近代史視角은 「近代中國像은 비뚜러져 있지 아니한가—洋務와 民權 및 中體西用과 儒敎」(『歷史와 社會』 第2號, 1983年 5月)에서 좀더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다. 溝口교수는 먼저 中國近代史研究가 毛澤東革命의 源流를 찾는다는 視角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即 毛澤東革命을 中國近代의 完全한 도달로 보았기 때문에 農民을 기반으로 한 人民民主主義 내지 社會主義革命에 이르는 맥락을 밝히는 각도에서 연구되었다. 清末思想의 경우를 놓고 보면 농민운동, 민중운동에 관련된 연구축적은 늘어났으나, 清朝體制에 관련되었거나 그것을 지지하였던 인물들의 연구는 무시되었거나 부정되기만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 體制에 관련된 인물이나 그들의 사상활동에 대한 연구 없이 어떻게 근대사의 전모가 올바르게 밝혀질 수 있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한 그는 그 첫 시도로서 양무파의 사상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가 제기한 구체적으로 재검토할 문제점은 1) 양무운동은 과연 중국의 근대화에 부정적인 작용만 한 것인가 2) 그들이 만든 湘軍·淮軍은 단지 봉건적인 성격만 갖는 것인가 3) 洋務派의 反民權의 言論 또는 그의 官權·國權의 주장은 단지 반동적인 것일 뿐인가 4) 張之洞이 주장하였다는 中體西用論은 과연 封建的 이데올로기일 따름인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洋務派를 ‘封建的 또는 半封建的 軍閥일 뿐 아니라 買辦的 獨占的 官僚부르조아지로서 帝國主義의 半植民地的 支配의 支柱’로 評價해버리고 나면, 洋務派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評價할 경우 ‘帝國主義的·支配階級的 視點’이 될 수밖에 없었던²¹⁾ 여태까지의 지배적 분위기로 볼 때 (비록 中國에서 유사한 洋務派 再檢討가 進行되고 있기는

21) 앞에 든 小島晋治書 p. 372.

하나)²²⁾ 그러한 문제점의 제기는 대담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양무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李鴻章·張之洞의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外國제품의 구축을 위한 노력의 표현이며 그런 방책은 민간의 기업에도 원용되었다. 그들의 민족공업 육성정책을 청일전쟁 패배후의 변화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도 실례를 분석해 보면 근거가 없는 말이다. 湘軍·淮軍 등의 봉건적 성격의 증거로 제시되는 地方割據性의 경우, 그것은 成立背景 自體가 청조 군사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하며, 北洋함대의 作戰權의 割據性의 경우는 作戰的 觀點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淮軍과 湘軍에게 ‘굳은 혈연성이나 종족성, 더 나아가 私的인 主從性’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明末 以來 清一代에 걸쳐 관류되는 封建論的 分治論과의 관련에서 고찰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그저 ‘反動的·後進的’이라고만 해치워 버린다면 清末의 民權運動의 기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民權運動에 대해서는 張之洞의 이른바 ‘反民權’의 사상이라는 것은 中國滅亡의 危機意識에서 나온 官主導의 對應策으로서, 紳士 中心의 民權運動의 地方分權的 志向에 反對하는 것이다. 이른바 洋務派는 官이 주도한 地方의 充實을 통하여 中央集權의 實을 이루려 한 사람들이다. 清朝 以外의 統一權力을 따로이 상정할 수 없었던 張之洞의 國家主義的 性格이 重視되어야 한다. 李鴻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國家主義를 볼 수 있다. 張之洞의 ‘反動性’의 指標로서 얘기되는 ‘忠’의 개념도 실은 朝廷에의 隸從的 忠誠이 아니라 ‘忠國安民’의 忠이며, ‘報國安鄉’의 忠인 것이다. 본래 忠이란 義를 媒介로 하는 것인 것이다.

中體西用論에 대해서는 體란 個別倫理를, 用이란 實務能力 또는 洋務能力에 不過한 것이므로, 中體西用論이 ‘洋務派 이데올로기의 표어’라든지, ‘政治·思想·文化는 모두 中國이 뛰어나 있으니 西歐의 기술만

22) 閔斗基, 『中共에 있어서의 中國近代史 研究動向(1977~1981)』(『열린글』 제 8 호, 1984. 도서출판 한울) pp. 27-32.

들어오면 된다'는 그러한 것일 수는 없다. 그것은 우월한 유럽文明을 받아들이는 측의 主體의 喪失을 염려하는 위기감에서 나온 생각이다. 즉 劣弱을 自覺한 者의 위기의식의 표명일 뿐이다.

洋務·變法·革命을 質的인 次元에서 段階的으로 보려는 三段階史論에 대하여서는 특히 洋務와 變法の 質的 基準인 民權이나 官權이나 하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명료한 것이 아니고, 또다른 質的 基準인 '中體에의 집착' 여부가 張之洞의 中體西用論을 잘못 이해한 때문임을 안다면 安易하게 單純化된 三段階說은 成立할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三段階論의 또다른 지표인 工業化, 制度改革 및 民權主張, 地方의 充實과 統一에의 志向 등은 서로 補完作用을 할 三位一體이지 서로 배척하는 相反된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상 溝口교수의 주장은 細部的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지만 종래까지 日本學界에서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던 洋務派論·'洋務論'을 보다 역사적인 실상과 근접시키려는 대담한 것이었다. 그것이 清末思想史에 대한 人民史觀에의 再檢討를 통하여 구성된 것은 최근의 다른 동향과 함께 中國現實에 대한 '密着史觀'에의 反省의 成果인 것이다. 溝口교수의 이 洋務論批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韓國人學者의 연구성과와 併行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鄉紳論批判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日本의 學界가 日本學界에서의 成果에만 安住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연구성과 섭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一般的으로 日本의 中國史學界는 西洋人の 研究成果에 대하여조차 冷淡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6. 맺 음 말

戰後の 日本의 中國史研究가 中國史 自體에 대한 연구일 뿐 아니라 同時에 日本의 近代를 생각하는 것이며 研究者 自身の 知的 良心의 문제까지 포함한 日本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음은, 日本의 近代史가 실은 中國과의 관련을 빼고는 成立할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과도 관련하여 어느 면에서 당연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中國의 現實과의 密着을 中國史研究의 不可避한 前提로 삼아야 하는가는 또다른 문제였다. 立場만을 달리하면—같은 마르크스주의자라 할지라도—中國의 現實에 一方的으로 밀착함이 없어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니 中西功가 毛澤東思想을 研究함에 있어 ‘그것이 中國의 社會主義的 土台와 그 客觀的 運動法則을 代表하거나 反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毛澤東思想은 社會主義的 土台와는 거의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 例이다.²³⁾ 中西功의 結論이 옳고 그르고 간에 日本에서도 하려고만 한다면 그러한 研究가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中國史에 封建制를 설정하는 立場에서 있으면서도 地主·佃戶關係를 基軸으로 한 封建制論으로서는 皇帝를 頂點으로 하는 集權的 官僚機構의 存續을 說明할 수 없다고 自己批判을 한 바 있던 學習院大學의 柳田節子교수는²⁴⁾ 『中國史像의 再構成』의 書評(『東洋史研究』43-2, 1984)의 첫머리에서, 이 책을 ‘戰後の 中國史研究를 그 出發點으로 되돌아가 再檢討하여 새로운 좌표축을 설정하여 中國史像을 再構成’하려는 것으로 評價하고 나서, 이 책을 대한다는 것은 ‘戰後の 停滯論批判이(즉 世界史的 基本法則貫徹論이) 뜨거운 입김으로 논의되던 시기에 中國史研究

23) 坂野良吉, 「毛澤東主義의 歷史的 性格을めぐって」(『歷史學研究』514, 1983. 3.) p. 48.

24) 앞에 든 閔斗基編, 『中國史 時代區分論』 p. 212.

에 발을 내딛은 나로서는 이 책은 마음 속에 쓰림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라고 告白하고 있다. 지난 날의 그 뜨거운 입김으로 가꾸어 놓은 것이 지금은 만지기만 하면 쓰린 그 무엇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中國近代思想研究者인 丸山松幸(東京大學 教養學部 교수)의 다음과 같은 기술도 中國現實의 변화에 대하여 당혹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 日本도 中國도 그리고 그 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크게 변화하였다. 日本은 급속도로 경제대국이 되고 자원공급국인 아시아 여러나라 위에 크게 솟아올라 있다. 中國은 文化大革命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네 가지 現代化'에 전념 돌진하고 있다. 두 나라의 국교는 정상화되고 '日中友好'의 무드드가 한창이며 中國은 日本의 近代化의 길을 배우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지난 날 우리들이 파악한 과제가 허망한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늘의 상황이 그 과제를 극복하고자 생긴 것으로는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다. 만약 우리가 日中 두 나라가 걸어온 近 100년 간의 역사의 질적인 차이를 잊고 '近代化에의 日本의 길'만이 유일 최선으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²⁵⁾

丸山은 中國現實의 변화에 대해 당혹하면서도 그것이 日本을 신판 '東亞의 盟主'의 잘못된 길로²⁶⁾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고 우려하고 있다.

坡野良吉은 앞에 언급한 「中國近代研究의 思想과 方法」에서

中國研究가 倫理主義와 毛澤東革命論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은 研究의 客觀性, 科學性에 있어서 一定한 전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客觀主義가 곧바로 混迷를 바로잡게 해주는 것일 수는 없다. 現存의 日本이 스스로의 近代와 그 再出發로서의 戰後의 行路를 통하여 中國과는 다른 課題를 일단은 갖기에 이르렀음을 아마도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現代의 物質文化나 個人的 自由의 觀點에서 社會主義 中國의 현실을 相對的으로 낮게 評價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日中 두나라의 가혹한 역사적 체험에서 (무언가를) 배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中國人民革命이 帝國主義를 낳은 近代化에서의 內在的 批判이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해방사업이 帝國主義·軍閥·買辦資本

25) 丸山松幸, 『近代中國의 革命思想』(1982, 研文出版) p. 266.

26) 丸山松幸의 後藤延子の 書評(『近代中國의 革命思想』)에 대한 反駁, 『東洋史研究』 43-2, p. 141.

에 의해 利用되고, 未解決인 채 남겨진 內部的 矛盾의 어떠한 止揚하고자 하였는가, 또 그것이 어느정도 달성되어 왔는가를 이해하는 일이 帝國主義的 近世化 再現의 허망함을 폭로하면서 敗戰後의 反省을 日本의 矛盾克服으로 연결시키는 共同的 綜合研究의 一翼일 수 있는 條件이 될 것이다(pp. 21-22).

라고 하고 있다.

이같은 충격, 당혹, 혼미의 극복이 私的인 좌석에서 구두로 표현될 때는 더 절박한 표현으로 나타났으니, 1984年 10月 27日, 筆者는 때마다 침 訪韓한 앞에 言及한 丸山松幸교수와,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立場에서 太平天國研究를 해왔던 小島晋治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위에 소개한 것 같은 최근의 연구동향이 話題에 오르자 小島교수는 이제 “呪縛으로부터 벗어나 自由로운 立場에서 새로 시작해야지요. 프랑스의 ‘장·세노’ 같은 사람은 中國研究를 그만 두어버렸다고 합디다단...”이라고 하였고, 옆에서 듣고 있던 丸山교수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中國의 현실에서 日本의 未來를 봐야 한다는, ‘呪縛’에서 벗어날 때 생길 수 있는 新版 ‘日本優位 中國蔑視’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도 아울러 덧붙이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그 같은 우려가 만일 현실화 된다면 그것은 또다른 ‘密着史觀’ 때문일 것이다. 中國에서의 現實의 變化에 자극받은 위에 소개한 것 같은 새로운 연구는 79年末頃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다가 80年代에는 그 成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같은 成果가 日本의 학계 일반에 全面的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는 아직 없겠으나 『史學雜誌』의 ‘回顧와 展望’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거론되기 시작한 것만도 상당히 큰 學界의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批判을 열매맺게 할 代案이 충분히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 ‘中國史研究會’論者が 封建制批判論의 代案의 一部로서 前近代社會의 理解의 기초에 ‘小經營農民’이라는 개념을 기축으로 하여 國家的 奴隸制에서 國家的 農奴制, 부르조아化의 여러 단계를 설정하려 한 듯하나 아직 本格的으로 論評받을 만한 단계는 아닌 듯싶다.²⁷⁾

日本の 中國史研究의 최근 이와 같은 동향을 살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사연구 대상과의 거리의 문제가 좀더 심각하게 논의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역사연구의 대상은 일정한 시간적 거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고전적인 논리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도 좋을 것이며, 또한 이 시간적 거리는 동시에 연구대상과의 位相的 距離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생각되는 것이다.

27) 柳田節子は 앞에 언급한 書評에서 지극히 조심스럽게, 조마조마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온건한 필치로 「무난하게」만 評을 하고 넘어가고 있다.